



디자인비엔날레 출품작 '즐거운 나의 의회' 23일 제4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2일~10월23일) 전시 관계자들이 안드레스 자크의 출품작 '즐거운 나의 의회' 주변에 자유롭게 앉아 토론하고 있다. 담양의 대나무로 만들고 오두막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작품은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 설치됐다. > 관련기사 12면 /4명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전남 시군구 7곳 통합대상

광주 동구·목포·나주·광양·곡성·구례 등 인구·면적규모 기준 해당

지방행정개편위 영역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가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소 2개, 최대 7개 시·군·구를 통합대상으로 하는 통합기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검토 중인 '시군구 통합기준 연구 영역안'에 따르면 인구와 면적을 포함, 시군의 경우 9개 기준, 자치구

의 경우 4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기준 중 인구 규모 기준은 ▲특별시 자치구 27만6000명 이하 ▲광역시 자치구와 일반시 15만명 이하 ▲군 3만3000명 이하, 면적규모 기준은 ▲특별시 자치구 16.2km² 이하 ▲광역시 자치구 42.5km² 이하 ▲시군 62.46km² 이하로 하고 있다. 이 기준안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와 중구, 부산 영도·서·동·중구, 대구 중구, 인천 동구 등 8개 자치구와 경기 의왕·과천시, 충남 계룡시 등 3개 도시가 인구와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인접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목포시-무안군, 경기 안양-군포-의왕시, 충북 청주시-원주군, 전북 전주시-완주군 등이 통합대상에 해당된다고 영역안은 적시했다. 이와 함께 광주 동구, 목포시, 나주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등 69개 시·군·구는 인구 규모나 면적 규모 중 1가지가 통합 기준에 해당돼 잠재적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2면>

이와 관련, 개편위는 지자체 통합 기준을 담은 영역안을 놓고 수차례 분과 회의와 토론회를 열었으며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통합 대상에 오른 지자체 간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개편위 관계자는 이날 "현재 영역안은 논의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며 "일부 기준에 대해 위원들 간 생각이 달라 영역이 확정될 때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서울시 무상급식 오늘 주민투표

서울시의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관한 주민투표가 24일 실시된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는 정국의 향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야는 촉박을 견뎌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서울지역 유권자 838만7278명 가운데 3분의 1(33.3%)인 279만 5760명 이상이 투표한 것으로 확인되면 오후 9시를 전후로 개표가 시작돼 오후 11시께 결과가 집계될 전망이다.

반면,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한 개표는 이뤄지지 않는다. 투표율이 33.3%가 넘었다면 민주당 등 야권이 내세우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안'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세운 '단계적 무상급식안'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민투표 불참을 하고 있어 투표자의 상당수는 한나라당 지지층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보편적 복지 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야권의 기(氣)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반면, 오 시장은 무상 복지를 목표로 내세운 '보수 진영의 대표 정치인'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권의 정국 주도권이 강화되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못하면 야권이 사실상 승리하게 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 정책이 탄력을 받으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야권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다는 점에서 사퇴는 10월 이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이뤄지는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야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진풍을 겪고 있는 야권대통합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단일 후보 논의를 계기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반면, 여권의 정국 주도권이 약화되고 내년 총선과 대선 전략에도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한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약영향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 같은 흐름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산강·주암댐 물 끌어오고 518그루 버드나무 심고

광주천 수질개선 3년간 643억 투입

광주시에 광주천 수질개선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64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691억원을 투입한 광주천자연형하천사업에 이어 10년 간 1200억원이 넘는 예산이 광주천 주변 정비 및 수질 개선에 쓰이게 된다.

광주시는 23일 "오는 2013년까지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300억원, 도심하천 복원사업에 250억원, 주암댐 여유수량 광주천 공급 사업 93억원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광주천 중하류의 자정능력이 회복되고 동시에 광주천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대신 영산강 상류에서 10만, 주암댐 여유수량 10만, 등 20만의 맑은 물이 광주천에 공급돼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분석이다.

광주시는 우선 기존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수 대신 영산강 상류의 물

을 공급하기 위해 취수관과 취수관, 송수펌프 등을 설치하고 광주천 유촌교~원지교 사이 3km 구간을 518그루의 버드나무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데 국비 180억원, 시비 120억원 등 300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도시화에 따른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천 자정능력이 상실된 광주천에 중·하류구간 2.5km에 오는 2014년까지 국비 125억원, 시비 125억원 등으로 수질정화시설 및 유지용수공급 관로 매설, 수생식물 식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제1하수처리장(서구 치평동), 제2하수처리장(광산구 본덕동)에 이어 남구 일암동 일대에 제3하수처리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93억원 전액이 국비로 지원되는 주암댐 여유수량 10만톤의 광주천 공급을 위해 2012년 말까지 5.545km의 송수관로도 설치된다. 이 외에도 광주시는 업체나 기관으로부터 민간자본 19억7000만원을 유치해 광주천 부지에 야생화 군락지를 조성하는 등 광주천에 대한 공공·민간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카다피 시대 끝났다" 잘릴 리비아 반군 수장 승리 선언

리비아 반군을 이끌어온 수장이 22일 42년간 참관총통을 해 온 무아마르 카다피 시대의 종언을 공식적으로 고했다. 이는 지난 6개월간 투쟁해온 반군 측이 이미 승리했음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관련기사 5면>

반군 대표기구인 과도 국가위원회(NTC)의 무스타파 압델 잘릴 위원장

은 이날 뱅가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카다피의 시대는 끝났다"며 리비아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군사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잘릴 위원장은 "카다피를 생포해 어떤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계를 늦추진 않았지만, 국

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카다피를 재판에 넘기기 위해 생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그의 반인륜 범죄를 단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또 반군 지도부에게 찬사를 보낸 뒤 "그들의 말을 신뢰하나 반군 지도자 추종 세력 일부의 행동이 거

정스럽다"면서 이것이 바로 이전에 몇 차례 사임의사를 밝혔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잘릴 위원장은 정부를 출범시킬 지도자로서의 구상도 밝혔다. 새 정부는 안전과 안보, 평화와 국민의 번영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다피 정권에서 법무장관을 지낸 잘릴 위원장은 반(反)카다피 세력으로부터 NTC의 산하 역할을 했으며 포스트 카다피 체제를 이끌 인물로 꼽히고 있다. <방기자=연합뉴스>

사조그룹은 중소기업 강탈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기업 사냥꾼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정부가 외치는 '동반성장'에서 왜 사조그룹만 예외인가?

사조그룹이 46년 역사의 향토기업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 축산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발판으로 화인코리아를 헐값에 빼앗기 위해

어떻게 : 대기업의 힘과 자본, 고위 권력층과의 친분을 앞세워

1. 사조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닭, 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에 도와주겠다고 접근. (2011. 1. 4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 화인코리아 대표에게 "도와드릴 테니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안심시킨 뒤 바로 하루 뒤인 1. 5. 담보채권 몰래 매입.)
2. 사조, 법원에 화인코리아 회생인가에 동의한다는 의향서 제출하였다가 회생인가 심문에서는 반대외사 표시.
3. 사조그룹 임원 이창주는 주진우 회장과 고위 권력층과의 친분을 앞세워 (녹취록 있음) 화인코리아 경영진에게 회사를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음.
 - "현 재판부에서는 화인코리아의 명의로 99.9% 회생이 안 된다." (화인코리아 회생 담당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파산부)
 - 화인코리아가 부동산을 매각하여 반대 채권을 갚겠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부는 회생을 기각시킴. 채무를 갚겠다는 화인코리아의 자구노력이 재판부는 까다로운 보정명령을 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결국 사조가 화인코리아를 방해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
4. 사조그룹 주진우 회장의 전력
 - 이명박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회 위원장.
 - 전 국회의원. (15, 16대)
 - 노량진 수산시장 입찰 비리에 연루되어 유죄 선고 받음.

5. 화인코리아 채권을 매입한 애드윈플러스는 사조그룹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위장계열사.
 - 애드윈플러스의 전 회사명은 사조기획으로, 주소가 사조빌딩 내에 있었으나 화인코리아 채권 매입 직전 주소지 변경. 전 대표이사 이인우는 현 사조대림 대표이사, 주진우 회장과 함께 노량진 수산시장 비리에 연루된 전력이 있음.
 - 애드윈플러스는 자본금 1억 5천만 원의 회사인데 185억 원 상당의 채권 매입. 이 자금의 출처는 과연 어디인가?
6. 사조그룹은 회생에 찬성하는 농협이 채권을 매각하지 않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변제 공탁하는 수법으로 농협채권을 억지로 확보함.
7. 사조그룹은 경매가 진행되면 회사가 공중분해 된다며 일정액을 줄 테니 회사를 넘기라고 화인코리아 경영진을 회유. 화인코리아 경영진이 이를 거절하자 경매절차를 서두르겠다고 위협.
8. 화인코리아는 현재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사조그룹의 채권을 즉시 상환할 수 있음. 화인코리아가 파산하면 농가, 근로자, 협력업체 및 무담보채권자들의 막대한 피해 예상. 또한 닭과 오리들이 굶어 죽게 되어 집단 폐사 사태 불가피. 그러나 사조그룹은 지역경제에 미칠 극심한 타격이나 전 무담보채권자들의 손실은 무시하고 헐값에 화인코리아를 강제인수하려 하고 있음.

화인코리아 임직원 일동은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채무 상황을 약속드립니다.

건실한 중소기업들이 사조 같은 기업 사냥꾼의 비열하고 악의적인 횡포에 희생되는 비극이 대한민국 기업사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 화인코리아 임직원 대표 최 선 (H·P 011-9600-0248)

화인코리아 사냥에 동원된 사조계열사들 : 사조대림 · 사조바이오피드 · 애드윈플러스 (위장계열사) · 육성